

◆ 이영대 박사의 'Job' ◆

[이러닝 교수설계자] 이러닝 학습 기획·설계

[제1회]

이제는 일상용어가 된 사이버(cyber)는 '가상의'라는 뜻으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간이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인터넷을 매개로 인간의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인터넷이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교육분야도 단순히 칠판을 놓고 강의하는 데서 벗어나 사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과 교육을 접목시킨 '이러닝(e-learning(electronic-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육 세계가 만들어져 급팽창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러닝 분야에서 우리나라만큼 앞서가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입시학원을 비롯해 토폴·토익 등 영어검정시험, 성인 대상 교양강좌, 직장인 재교육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러닝은 보편적인 학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닝의 확산 속도는 인터넷 보급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내놓은 '2006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국내 이러닝산업 규모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조6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닝 사업자수는 전년보다 63%나 급증한 621개에 달했다. 최근 급팽창하는 이러닝의 교수설계자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닝 교수설계자란

이러닝의 확산과 더불어 이러닝을 관리하는 이러닝 교수설계자라는 직업도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2004년 1만3248명, 2005년 1만 6413 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9644 명으로 늘어 올해에는 2만 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학습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어떤 과목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맞춰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등을 기획·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닝의 전체 작업과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무엇보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러닝의 건축·설계·시공자

이러닝 교육설계자는 예컨대 집을 지을 때 설계사인 동시에 시공자 역할까지 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러닝 교육 과목을 선정하면 교육대상, 교육방식 등을 기획하고 설계한 뒤 사이버 공간이라는 환경에 맞게 학습내용을 가공한다.

즉 그림 동영상 텍스트 등 학습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내용이 만들어지면 인터넷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대개 인터넷 디자이너, 시스템 개발자, 온라인 강사와 같이 개발직업을 진행한다.

학습 콘텐츠 개발이 끝나면 애초 취지나 방향과 맞게 웹을 점검 작업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이러닝은 학교나 학원의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학습자의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살림을 달고 가는 것처럼 세심하게 일을 해나가야 한다.

질문에 대해 답변이 바로 오지 않는다면, 디자인이 허술하든지 하면 온라인 학습자들은 곧바로 불만을 제기한다.

잘못 대응했다간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적합할까

따라서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인간관계 조절, 업무 분장 능력을 갖춰야 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늘 안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적성면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꼼꼼한 성격이 적합하다.

토씨 하나, 마침표 하나 틀리면 바로 서비스의 질적평가가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오피스, 포토샵, 플래시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들도 익숙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한승훈 칼럼



한승훈 본지는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3일 학교 자율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시장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교육 열풍의 핵으로 지목받고 있는 특목고 입시방향의 개선과 영재교육 대상자선발방식의 개선, 공교육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사교육시장 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특목고의 입시방향을 보면, 2011년(현재 중학교 2학년생에 해당)부터는 과학교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을 도입하고, 현행 실시하고 있는 경시대회의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하게 된다.

외국어고의 입시에서는 지필고사와 각종 경연대회 수상실적의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내신 반영시 수학·과학 비중치가 현행보다 낮아지며, 각 외국어고등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출제했던 영어듣기평가 문제도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하고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 방식을 현행 지필고사방식에서 학교장 추천과 학회심사로 대체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도 시험 대신 영재교사의 관찰을 통한 추천으로 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올해 총 5만5천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공교육의 자율성 강화내용으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의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영어과목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교실을 옮겨 다니며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사교육시장의 억제 대책으로 온라인 학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과 오프라인 학원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속칭 '학파라치')를 연말부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학원 십야학습 금지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시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있을까...

교육청이 자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원운영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선연고 3단계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과학교 발전방안,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

이번 교과부가 사교육경감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을 놓고 각계각층에서는 현재의 사교육 열풍이 획기적으로 잠재될지라 보고는 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과거 정권에서 한번쯤 시행해 오다가 실패한 내용의 재탕이라거나 오히려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실패된 교육정책의 수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다.

과학캠프를 활용한 과학창의성 전형은 이미 부산영재고(현 한국영재학교)의 초창기에 도입되었던 입시전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했다. 영재위주의 교육정책은 학력부진자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각종 경시대회 입상실적과 영재교육 이수자 특별전형을 없앤다면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영재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영어 듣기평가의 난도를 낮추어 공동출제하는 방식은 응시자의 수준제하는 물론 변별력없는 시험으로 전락하는 입시부정 등의 또 다른 폐단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배치되고 영어회화과목이 개설되면 그 과목을 보강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은 영어학원을 찾게 되고 영어학원은 더욱 국성을 부릴 것임에 틀림없다. 학원의 학파라치를 투입한다고 하지만 학원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원을 교육에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학원은 물론 이미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납득시키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입시대책과 사교육비경감시책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숱한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데에 국력을 쏟았지만 그럴 때마다 사교육은 영풍한 방향으로 옮겨지고 별폐만 드러날 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드러 노력하는 정부일수록 정책실패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정부의 지지를 잃어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의 서열화에 의존하는 사회구조적 병폐가 문제이다.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학벌중심의 사회구조와 병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바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대책은 대학의 서열화에 의존하는 학벌과 인맥중심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영원한 과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풍선이론처럼 어느 한 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불거지게 되고, 불거진 한 쪽의 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바 '사교육경감대책' 하면은 국민들은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민성적인 불신풍조마저 팽배해 있다.

그렇다고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말인가.

사교육을 시기하는 것만으로는 공교육의 권위를 찾을 수는 없어

학벌에 의존하는 사회구조가 갖는 폐단 속에서는 교육이 철학과 도덕적인 문제를 던져버리고 오로지 입시를 위한 지식습득의 무한 경쟁으로 치달는 현실인데, 무슨 약인들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멀지 않은 인접 국가인 일본의 예에서도 우리와 같은 현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들도 이러한 대책에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닐진데 입시과열 현상은 우리나라 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못 미치지지는 않는다.

사교육 시장의 대명사로 지목받는 과외학습은 애초에는 공교육의 학력부실이 초래하는 입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큼 과외학습에 종사하는 자들도 공교육의 학습지도능력을 뛰어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이라고 할 만큼 사교육은 하나의 산업화되어 있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장회사도 몇 개가 생겼으니 말이다.

학원강사는 일부 학생들이 희망하는 하나의 선택의 직업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일류 명문대출신의 엘리트 전문강사들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유입되고,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인력들마저 상당수 유입되고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의 교사보다는 학원 강사를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의견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교육 시장이 담당하는 고용창출과 국가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교육을 맡은 정부가 사교육을 시기하는 듯한 현재의 태도로는 결코 공교육의 권위를 찾을 수 없다.

사교육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 두는 것이 경제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통제와 관리체제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키며, 사회적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사교육시장을 사멸시킬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경쟁의 장을 사교육시장에 내다버리지 말고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아래에서는 사교육이란 공교육의 보완제이어야 하지 결코 공교육의 우등재일 수는 없다. 입시경쟁의 열풍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과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입시과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를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사교육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경쟁이 공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의 학원화를 이루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공교육의 질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미래의 입시를 위한 학력향상, 공교육에서 충족할 수 없는 학습욕구충족 등이 대부분이고, 학교수업의 불만족에서 사교육을 찾는 경우는 그 후순위에 있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또 아무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여도 학교교육을 핑계치고 학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사교육에서는 이를 수 없는 인격형성, 준거 집단의 형성, 사회성 습득, 사회화 학습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학력향상 측면이라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이고, 교사의 수를 현행보다 3배 이상 대폭 증가시켜 교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사교육시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을 흡수하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형의 질 높은 수업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교사의 역량강화와 능력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의 존재이유가 되는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심과 사회연대성을 체험하고 인식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공교육이 실현될 때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향상은 저절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영재교육을 실현하기 수월해 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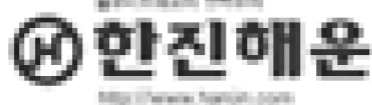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사교육시장을 자연히 고사시킬 수 있는 방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사교육비를 고스란히 정부가 안아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이상론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당장 일거에 바꾸려 하지 말고 5년,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행해야할 국가적인 대 과제로 채택되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컨테이너

한진해운의 원적주의와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앞선 맞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고객에게 가장 소중한 상용화기에 맞춰 서비스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진해운은, e-비즈니스 전략, Cargo Business News(이)를 고객서비스 우수 평가 선정 및 수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진해운의 맞춤 서비스와 함께 가장 행복한 고객이 되실 것입니다.



한진해운의 원적주의와 만나는 순간